

애플 '소비자 뿔났다' ... "고작 배터리 지원, 공지도 안해"

애플, 이례적인 공식 사과 했지만... 소비자 분노 여전 전 세계 집단소송 봇물... 국내서도 25만명 이상 참여 애플코리아, 배터리 교체 지원 공지없이 안내해 물의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킨다는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 사과하고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소비자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으로 애플에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프랑스, 호주, 이스라엘에서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국내도 25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소송인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2일 통신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애플이 이례적인 공식사과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했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내 소송인단을 더 늘어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2월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우리는 구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아이폰의 성능을 관리하는 방법과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일부 고객은 애플이 실망을 시켰다고 느끼고 있다. 사과드

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애플은 고의적인 성능저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를 오해라고 일축하며 "아이폰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 환경을 악화하는 일은 절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를 달래기 위한 지원책을 함께 제시했다. 애플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체 배터리 가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해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iOS 업데이트 때 사용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배터리 상태가 기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애플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분노를 강하게 드러냈다. 미국 각지 법원에서만 모두 9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한 9999억9999만9000달러(약 1072조원) 규모의 소송이 제기됐다. 프랑스의 한 소비자단체는 애플이 '계획된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는 소비자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기기에 대한 의도적 노후화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에서는 법무법인 사인 로이어즈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사인 측은 피해자 50만명 이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달러(1조 68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애플의 사과를 두고 논란은 커지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본사 정책에 따라 배터리 교체 지원을 시작했지만 어떠한 공지도 없이 진행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코리아는 이날 오전부터 고객들에게 배터리 교체 지원 안내를 시작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오

늘부터 일년동안 배터리 교체 비용이 지원된다"며 "다소 혼잡할 수 있으나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에 따르면 아이폰6, 6+, 6S, 6S+, SE, 7, 7+에 한해서 10만원인 배터리 교체 비용을 3만4000원으로 인하한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배터리 교체 지원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기껏 사과를 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무성의"를 넘어 "무시"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같은 애플코리아의 조치는 소비자의 분노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게이트 집단소송 참여인원은 애플의 사과이후 더 늘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배터리 지원만을 가지고는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소송인단 참여는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모집을 시작한 이래 며칠만에 25만명을 돌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기준 소송인원이 25만 5331명으로 집계됐다"며 "11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이날 중 구체적인 소송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아이폰 성능조작' 국내 첫 소송... "소비자권리 침해"

소비자주권회의,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피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장 접수



애플이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처음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됐다. 소비자주권회의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애플코리아의 아이폰(6·SE·7 시리즈) 성능조작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하게 기기가 꺼질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세계 소비자들은 애플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아이폰 교체를 불러일으켰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주권이 처음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소비자들의 업데이트에 관한 선택권을 주어 소비자의 동의하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폰을 판매할 당시 상품의 포장지에 아이폰의 배터리 잔량이 20~30% 떨어지게 되면 기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실시한다는 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기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사 제품의 구매당시 사용설명서에 표기가 없었다면 업데이트 당시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고지해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당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에도 애플은 이러한 기회를 박탈해 기업가의 책무를 위반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소유 사용하는 아이폰은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는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소비자들을 원고로 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

지역구관민백성조성문득됨
湖南新聞
전화 062/224-5900
팩스 062/222-5548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